인문논총 제74권 제1호 (2017.2.28), pp. 413~423
[DOI] http://10.17326/jhsnu.74.1.201702.413

침묵에 다가가기

[서평] 차승기(2016),『비상시의 문/법-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그린비, 383쪽.

박 형 진*

1. 식민지 말기 연구의 신체성

책을 받아들고 마지막 장인 「멜랑콜리와 타자성」부터 읽었다. '식민지 말기 문학 연구의 한 반성'이라는 부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10년의 세월을 훌쩍 넘는 사유의 결과물을 앞에 두고 어째서 그에 대한 '반성'부터 서둘러 확인하려 했던 것일까. 물론 미발표 원고라는 사실이 동시기에 관심을 가져온 후학이자 조용한 팬을 끌어당긴 것이지만 그 뿐만은 아니었다. 아마도 최근 몇몇 식민지 말기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에서 감지되곤 하는 위화감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테다. 그것을 "전시체제기 식민지의 문학과 삶을 '줄곧' 연구해 온 당사자"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식민지 말 연구의 의미와 임계를 돌아보는 마지막 장의 논의에서 출발하여 책이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1990년대 이후 한국근대문학 연구가 '근대성'을 커다란 화두로 하여 분기되었음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다. 이 가운데 '국민문학'을 중심으로 식민지 말기를 주목해온 계열들은 '한국 근대 문학사'의 스캔들을 정면으로 다루며 그 자체를 내파하며 확장시켰다. '암흑기'로 일소해왔던 이 시기를 '친일(협력)', '전향', '일본어 창작', '동원' 등과 같은 키워드로 조명하면서,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온 일국사 중심의 역사기술을 의문에 부쳤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들은, 근대의 영성(spirituality)이자 파국의 한 사례로서 '전시체제기'를 붙들어 폭력비판론을 전개하는 한편, 반복·회귀할 미래와 포개어지는 원점으로 소환하였다. 예컨대, 식민지 말기는 "근대의 폭력과 생명정치, 지배 테크놀로지, 국가 구성에 관한 전쟁 모델과 언어 모델, 민족과 국가, 자본주의와 국가경제 등을 근원으로부터 질문할 수 있는 장소(topos) 그 자체"였고, 그런 한에서 '지금, 여기'를 다시 묻는 "대유법의 시간"[1]이었던 것이다. 『비상시의 문/법』은 이러한 흐름과 문제의식의 한복판에서 일구어낸 언어적 실천의 결과물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위와 같은 실천들이 "어떤 형태로든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343)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하나의 '붐'을 형성했던 전시 체제기 문학 연구가 '동어반복의 울타리' 속에서 서성대다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식민지 말기로 시선이 전환되었던 순간으로 돌아가 어떤 역사적 시기를 경험했던 연구자의 시선을 포착해 반성적으로 고찰한다. 요컨대 "역사의 발전과 진보라는 이상"이 사라지고, "'외부'를 향한 고투"가 의미를 발하지 못하며, "말과 사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붙들어 매어 놓았던 역사의 응집력이 해체"(347)의 길로 접어들었던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라는 세계사적 격변기 속에서 '폐허'가 된 과거를 응시하는 시선이 등장하였는데,

1) 황호덕, 『벌레와 제국-식민지말 문학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 2011, 70쪽.

식민지 말기는 이에 호응하는 시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승리만을 구가할 것으로 보였던 서구적 문명・문화가 근본적으로 의심되고, 이를 떠받치던 발전과 질서가 의장에 불과했음이 폭로되던 시기로 호명되었던 '전형기'는 '세계의 세계성'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주체의 시선을 "멜랑콜리적 태도"라고 명명한다. 이는 진보와 발전이라는 근원적인 소유 불가능성 앞에서 절망하는 자아, 애착하면서도 증오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매만지며 허망하게 사물들을 응시하는 자의 태도로 정의된다. 문제는 이 "멜랑콜리적 태도"의 증상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언어와 사물의 폐쇄회로를 구축하여 역사적인 경험일지도 모를 식민지 말기를 절대적인 것으로 승격시키거나, 텍스트의 외부(the real)를 추방하기도 했으며, 안전한 거리에서만 존재하는 타자들을 발견해 온 것은 아니었는지를 자문하듯 지적한다. 요컨대, 그간의 연구들이 때때로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입장이나 역사적 조건에 놓인 사건과 주체들의 위치를 연구자의 자아 내부로 되돌려, 담론의 평면 속에 가두기도 했다는 자성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랑콜리에는 소유 불가능성에의 자각이라는 고유한 속성 때문에 역사의 '실재 상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 만일 멜랑콜리가 근원적인 소유 불가능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욕망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건너갈 수 없는' 간극을 상기시켜 주면서 역설적으로 '객체'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현실적인 상실/소유와 상관없이, 아니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준다. (중략) 따라서 대상은 욕망 관계에 의해 묶여 있던 끈에서 풀려나 "욕망이 제거된 대상 그 자체의 현존"으로 돌아간다. 바꿔 말하면, 언설의 질서에 의해 말에 사로잡혀 있던 사물들이 그 말의 주술에서 놓여나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실재 상태를 엿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350)

‘영웅적 멜랑콜리’(벤야민)라고 명명된 집요한 탐구의 자세야말로 여러 부침 속에서도 저자가 견지하고자 하는 방법적 태도로 보인다. 근대성, 국민국가, 파시즘 비판론 등이 결합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지난 20여 년간의 식민지 말 연구가 어떤 반복 속에서 침잠해가고 있는 상황을, 시기를 옮겨가 ‘증상으로서의 멜랑콜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의 ‘위기 상황’ 속에서 펼쳐졌던 말과 사물의 무질서한 배치와의 만남의 순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 말 연구가 가졌던 의미, 그러니까 한국(문학)사의 가장 어두운 장면들을 낯선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떠오를 수 있었던 ‘타자성’을 근원적인 물음으로 삼으려는 태도로 읽을 수 있다. 이 책이 ‘문학사’로부터의 참조나 문학사에의 기여 의지에 무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반성’이 다른 층위에서 흥미로운 것은, 식민지 말 연구로 견인한 일련의 사태들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폐허’를 응시하는 시선의 탄생이 비단 동구권의 몰락이나 거대서사의 파괴, 포스트 담론의 횡행, 지구화 등에 대한 응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좌절의 경험이기도 했다는 것. 아니, 외부와 내부의 붕괴 자체가 분리 불가능하게 엮여 있다는 자각 속에서 솟아올랐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그런 점에서, ‘멜랑콜리적 태도’와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했던 어떤 신체들과의 연관을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민지기의 전향, 협력, 기술적 이성 비판의 배후에는 어떠한 경험, 신체가 접속되어 있는 것일까. 어쩌면 여기에 어떤 연루(連累)의 감각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연루가 계속되는 폭력과 불의의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심리적 상태이자 그 현실에 저항하는 사회적・정치적 실천[2]을 뜻한다고 할 때, 식민지 말을 연구한다는 것은 계속되는 식민주의의 폭력적 흔적을 더듬는 일이나

2) 테사 모리스 스즈키, 박광현 역,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산처럼, 2005, 34-36쪽 참조.

(근대)국가의 극단적 형태를 사유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를테면 그것은 패배로 점철된 역사와 지배의 언술로 촘촘하게 둘러싸인 현실에서 언어로서 삶을 확보하는 방도를 찾는 일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일단 이런 억측과 어지러운 단상을 곁에 두고,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몇몇 국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 말이 시작되는 장소

『비상시의 문/법』은 '전형기'를 둘러싼 언설과 소설・비평 등을 질료로 삼아, 식민지배의 구조와 그것이 구조화한 담론지형을 묘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라는 부제에서 간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는 국가권력이나 지배 테크놀로지 분석이라기보다 제국이 부여한 지배질서 아래에서의 식민지의 삶과 언어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는 "식민지/제국을 하나의 체제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 체제의 언어-법-미디어의 문법 내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개방되어 갈 잠재성을 모색한다"(13)는 문장에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저자가 머리말에 공들여 설명하고 있듯, 여기에는 세 가지의 방법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식민지/제국을 '하나의 체제'로서 다루며, 그 체제의 모순과 곤경을 언어-법-미디어의 '문법 내부'에서 찾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선 기왕의 식민지에 관한 논의가 (무)의식적으로 제국의 외부를 상정해 둠으로써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해석의 지평을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식민지를 제국에서 배제된 것,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할 때, 민족, 주권, 국민국가의 언술로 손쉽게 회수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든 식민지의 삶과 언어를 저항과 협

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재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인식에도 같은 난관이 존재한다. 예컨대, 식민지를 제국의 시스템 안에 완전하게 포섭・제어되는 공간으로 서술할 경우, 제국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격상시켜 그것을 탈구축할 가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식민자의 주체성은 '무력한 피해자'의 이미지로 축소되어 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식민지/제국 체제'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여기서 '/'는 등가적인 것을 구분 짓는 기호도 아니고, 양자의 필연적인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도 아니다. 하지만 식민지와 제국은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식민지 없이 제국이 존재할 수 없으며, 제국 없이 식민지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코 대등한 관계로 설 수 없게 하는 권력의 비대칭성이 사선으로 가로놓여 있다. 다시 말해, '식민지/제국 체제'는 식민지가 제국의 외부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제국에 완전히 포섭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식민지는 제국에 사로잡힘으로써 비로소 생성되는 대상"(257)이면서 그럼으로써 제국과 "함께 연루되는 구조"(258)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면서도, "한국(조선)과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체제'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식민지/제국의 갈등과 규율화의 변증법을 포착하기"(10) 위한 개념이다. 하지만 저자는 '식민지/제국 체제'가 식민지기 내내 뚜렷하게 체제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연루의 관계는 제국이 식민지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야 할 때 즉, 전쟁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의 수단으로 식민지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형태로 부상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제국의 통치성이 노골화되는 때야말로, 식민지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선이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기'는 '식민지/제국의 갈등과 규율화의 변증법'이 가장 첨예하게 현상하는 시기로 지목된다. 『비상시의 문/법』이 그려내고 있는 '전형기'는 한편으로 '생명으로서의 인간'을 남김없이 정치의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제국의 통치성이 극단에 이른 시기이자, 온갖 희망적

관측이 의심되며 해체되는 시기,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에의 욕망 혹은 불안의 사상이 난립하는 시기이다.

> '구주대전'(歐洲大戰)과 중일전쟁 등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무수한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명과 문화와 가치까지 파괴하면서 전 지구적인 혼란을 야기하던 시기, 정치적 영역에서의 나치즘, 파시즘 및 일본주의의 대두가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던 시기, 역사철학자들이 근대적 원리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현대'의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예감하던 시기, 또한 발레리의 '사실의 세기'라는 명명이 서양의 문명사적 몰락을 드러내는 징표로서 거론되며 '동양'의 세계사적 '사실'에 눈을 돌릴 것이 요구되던 시기, 그런가 하면 '국가총동원법'(1938) 공포 이후 '외지'/'내지'의 차이(및 동일성) 위에 '전선'/'총후'의 차이(및 동일성)가 덧씌워지던 시기, 그리하여 식민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식민 본국에서조차 전쟁하는 국가를 총력으로 익찬하는 이외의 정치적 활동 일체가 부정되었던 강요된 '탈정치화'의 시기(112~113).

그런데 이렇게 현기증 날 정도로 급박한 시간이 역설적으로 다른 말이 개시되는 장소가 된다. '전형기'가 기존의 모든 가치가 붕괴됨과 동시에, 지배의 문법과 규율의 테크놀로지가 부상하여 이 공백을 덧씌워가는 시기라면, 새롭게 구축되는 법을 둘러싼 언어 또한 증식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일관되게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어들이 자리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일전쟁을 계기로 재편된 언설 공간을 비집고 등장한 '동아협동체론'의 사상연쇄를 다룬 1장의 논의가 이러한 구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지배를 온존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제국의 문법(동아 신질서론)을 '식민지/제국 관계의 변화를 지향하는 언설'로 전환한 일군의 식민지 지식인들의 담론실천은, 통치의 문법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그 문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거나 '기만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주체의 장소가 박탈되고 모든 일상과 신체가 국가 앞에 노출되는 총동원의 세기 앞에서의 언어-삶의 윤리적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 2장과, 전선-총후의 의미론적 장치가 산출한 '서사적 주권성'의 박탈이라는 현상과 그 대응의 논리를 임화와 김남천의 사례로 살핀 3장과 4장의 논의도 식민지/제국의 구조의 틈새 속에서 발화되는 언어의 장소와 운명, 그리고 그것의 잠재·차단된 가능성을 묻고 있다.

식민지/제국 체제가 주조해 낸 언어-법-미디어의 궁지를 그 '문법 내부'에서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 같다. 식민지라는 변방의 언어는 그 "불균등성과 차별성", "역사-지정학적 위상을 발화의 입장에 각인"(61)하고 있었기에, '문법 내부'에 위치하면서도(혹은 그 곳에서 밖에 발화되지 못하면서도) 체제의 구멍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언어의 위상 자체가 '식민지/제국 체제의 삶'을 흔적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문/법'들이 식민지/제국 체제를 초월해 존재했다거나, 그것에 균열을 낼 주권적 힘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국 이들도 식민지/제국 체제에 의해 손쉽게 사라질 운명 앞에 놓여 있었다. '과학적 세계관'과 '총체성'의 원리를 비판의 도구로 삼았던 이들은 '실용적인 과학성'과 '기술적 이성'에 삼켜졌으며(5장), '내선'의 만남을 식민지의 존재론적 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몽상은 끝내 생명-죽음정치의 포획장치와 만날 수밖에 없었다(6장). 그래서 이 언어들은 아슬아슬하게 첨단(尖端) 위에 선 것이면서 실패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고민은 이런 실패의 기록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잠재성"의 영역으로 보존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잠재성들이 다시금 지배적인 언술의 질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언어화하는 것이다"(12)라는 진술에서 보듯,

폭력에 직면한 자의 능동성으로서 피식민자의 언어를 포착하되, 이 역능을 희망적 관측의 도구나 계량화된 지식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보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비(非)결정을 재(再)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주권적 존재"[3]로 다시금 등장하여 제국을 추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배적인 언술에 휩쓸리지 않는 '다른 문법'의 발명을 위해 저자는 개념화에 힘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대체로 일본을 경유한 국민국가론, 푸코에서 아감벤으로 이어지는 규율권력과 생명정치에 관한 논의가 그 원천이 되어 있다. 물론,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식민지 말기 연구의 주도적인 경향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개념을 통해 사태를 명명한 뒤, 손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도르노를 인용한 다음 구절이 표상 불가능한 사태를 개념을 통해 직시하려는 일관된 의지의 목적을 드러내준다. "비개념적인 것을 개념들로 동일화하지 않으면서도 개념들을 통해 비개념적인 것을 여는 인식의 유토피아"(316). 요컨대, 이 책에서 드러나는 개념화의 의지는 '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진입하려는 저자의 관점과 호응하면서도, 완강한 침묵의 형태로만 놓여져 있는 삶의 형식을 개념을 통해 '거기에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을 통해 독자로서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식민정책과 권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문헌적・역사적 이해나 국가(비판)론의 사상사적 계보라기보다, 식민지/제국 체제에서 대량으로 양산되는 인간의 삶이며, 그 안에서 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몽상'과 '꿈'의 흔적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몽상'과 '꿈'이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부단히 확인시키는 식민지/제국 체제의 존재였다.

---

3) 도미야마 이치로, 심정명 역, 『유착의 사상』, 글항아리, 2015, 133쪽.

3. ‘다른 문/법’의 역사를 위하여

몇 가지 두서없는 소회로 서평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서두에서 필자는 최근의 식민지 말기 연구에서 종종 위화감을 느꼈다고 썼다. 생각해보건대, 그것은 식민지 말기를 초점으로 삼은 연구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몇몇 개념들을 왕복하며 관성적인 반복만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또한 어느새 부터인가 첨단의 이론과 개념들의 전장(戰場)이 되어버린 식민지 말기 연구의 실체 없는 추상성에 대한 불만 뿐만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식민지 말기 연구가 지금의 현실을 투과하는 장으로서의 여전히 어떤 실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기도 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근대성 연구가 남긴 유산이 세대를 넘어가면서 부정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했다.

반복하듯이, 근대성에 대한 연구는 근대의 기원, 또한 그것이 각인시킨 폭력 자체를 문제 삼으며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뚜렷하게 부상한 것은 1930년대 도시문화와 식민지 말의 국민문학과 그 담론이었고, 특히 전자의 성과들은 대중문화에서 거의 상식처럼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민족주의 비판론과 연계됨과 동시에, 국민/민족국가의 동일성의 폭력이 심문대에 올려졌고, 이에 따라 민족, 국가로부터의 탈주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4] 이 흐름이 가져온 효과를 세밀하게 따지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심드렁해진 것은 집단적 변혁의 계보와 자본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그 결과, 소비 주체의 탄생과 (국가에 대한)자본의 반역,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적 실천과 코스모폴리탄적 인간형의 탄생이 식민지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되고 때로는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을 참조했다. 권명아, 「연대(solidarity)와 전유(appropriation)의 갈등적 역학」,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이혜령,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 －목가적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돌아보며－」, 『여성문학연구』 제3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탈식민적 실천’이라는 의장에 덧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반대로 자본에 포위된 생활세계를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지금, 여기’를 식민지에 직접 접속시키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할 때, 저자의 말대로 “‘현재성’이란 어떤 특권적인 대상 속에서 발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구자 자신이 ‘위기 상태’에서 대상을 대면할 때 포착될 수 있는 것”(360)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 말기가 연구되어야 한다면, 그 연구는 ‘지금, 여기’의 경험 안에서 새로운 전선을 그어 나가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위의 단상과 관련하여 책에서 느낀 ‘부당한 아쉬움’을 부기해두고 싶다. 식민지/제국 체제의 권력의 작동방식과 삶의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한 이 책에서 자본의 문제와 노동하는 신체의 포섭이라는 문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의아했다. 짧게 보면 ‘전시체제기’로의 돌입이 1929년의 대공황의 임팩트와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고, 멀게는 제국의 성립 자체가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아쉬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의 저자의 관심이 바로 이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5] 너무 이른 짐작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이 연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접근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지는 않을까. 또한 “‘영웅적 멜랑콜리’가 응시할 ‘폐허’가 반드시 ‘전시 체제기’일 필요는 없다”(361)는 선언에서 간취할 수 있듯, 저자의 앞으로의 작업은 식민지 말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식민지/체제를 읽어낼 ‘다른 문/법’의 역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시의 문/법』을 읽을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친 요약만으로 일관한 이 서평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사유의 궤적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

5) 차승기, 「수용소라는 안전장치-오무라(大村)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제32집, 2014.2; 차승기,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흥남과 이북명」,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